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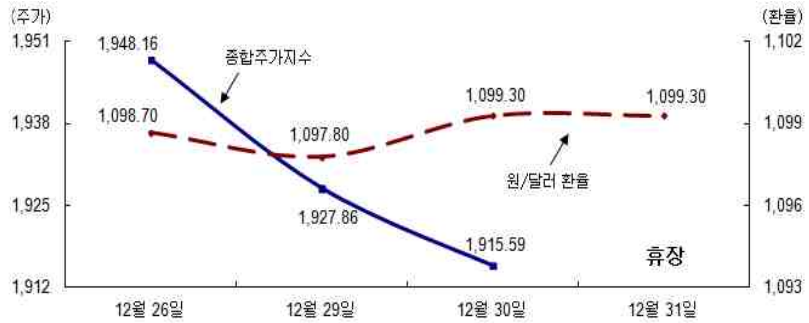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4.12.26~14.12.31)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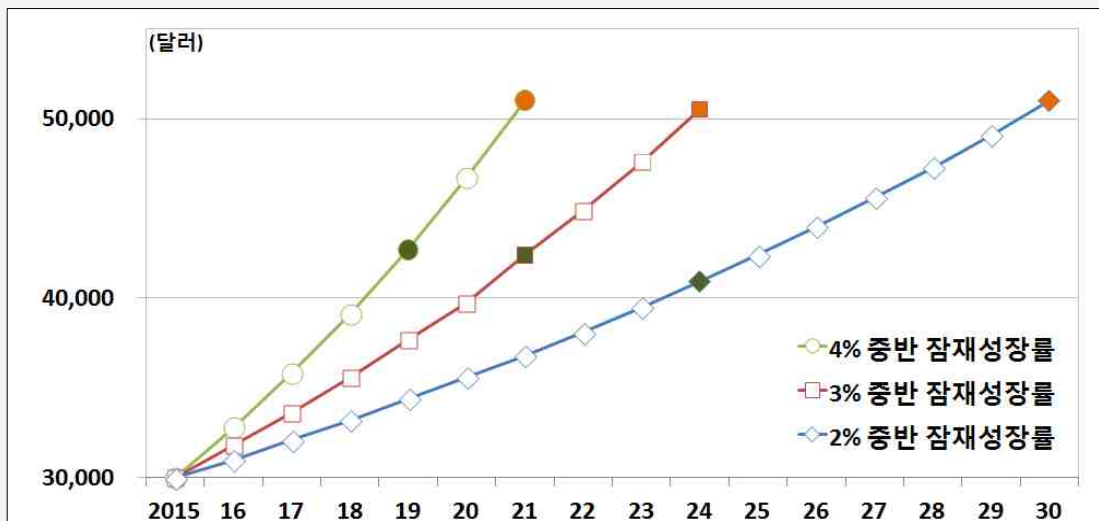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선진국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OECD 34개국 중에서 동유럽 및 중남미의 저소득국가를 제외한 25개국의 2013년 기준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만달러(49,357달러)이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는 선진국 그룹에서 평균 이상의 국민소득이며 “선진국 중의 선진국”임을 의미한다. 2013년 OECD 내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미국 등의 10개국에 불과할 정도이다.

■ 한국의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시기 전망

(1인당 국민소득 추이)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1인당 국민소득은 새로운 국민계정 편제를 기준으로 2013년 현재 2만 6,205달러이며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에는 3만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4년 1만달러에서 2015년 3만달러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1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시기 전망) 1인당 국민소득 결정의 핵심변수를 경제성장률로 가정할 경우 2015년 3만달러를 기점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국민소득 전개 경로가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기준 시나리오: 현 잠재성장률 수준 3% 중반 유지)** 달성기간중 성장률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 중반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24년에 5만달러에 도달하여 총 9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비관적 시나리오: 잠재성장률 2% 중반)** 향후 잠재성장률을 현 수준보다 1%p 낮은 2%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24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30년에 5만달러에 도달하여 총 15년의 소요기간이 예상된다. **셋째, (낙관적 시나리오: 잠재성장률 4% 중반)** 향후 잠재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19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21년에 5만달러를 달성하여 총 소요기간은 6년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별 1인당 국민소득(GNI)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의 조건은 첫째, (새로운 경제 모델) 경제 발전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정립된 새로운 경제 모델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성장 방식과 같은 양적 투입 위주가 아니라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생산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효율성의 척도인 TFP의 기여도가 금융위기 이전(1998~08년)에 2.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13년) 1.6%p로 급락하였다. 또한 외형적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 총량이 아니라 내실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모델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부가가치의 해외유출률은 44.7%로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수출제조업 강국 평균치 23.1%보다 21.6%p나 높다. 이로 인해 고용, 영업이익, 조세 등의 부가가치에 대한 파급 경로가 차단되어 경제 성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풍부한 성장잠재력) 자본과 노동의 절대적 투입량이 보장되는 생산요소 수급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은 부진한 자본스톡 축적이다. 고정자산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14.9%에서 위기 이후 11.3%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3.5%로 다시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의 원료인 자본스톡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로 예상되는 노동력의 절대 부족(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73.1%)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생산가능인구 규모 자체도 2016년(3,704만 명)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효율적 시스템) 새로운 추동력을 담보하는 생산성 변혁이 지속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의 무게중심이 가격에서 생산성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국의 빠른 추격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이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은 높은 생산요소 비용과 이에 따르는 저(低) 생산성 문제이다. 2010년 기준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GDP/근로시간)은 한국이 25달러 수준으로 독일과 미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으나 주력제품의 고부가화 및 생산성 개선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산성도 문제이다. 2013년 현재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7.1%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10년 전인 2004년 제조업의 67.2%에서 급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경쟁력을 담보하는 혁신성) 세계 산업 지형의 급변 속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기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투자 규모의 절대적 수준과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총연구개발비/GDP 비율은 4.3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R&D 투자의 절대적 규모 부족, 투자의 시차효과, 투자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다. 특히, 연구개발투자는 제조업, IT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기술혁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제조업의 R&D투자액은 33.4조 원으로 전체 R&D투자액 38.2조 원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R&D투자액은 3.4조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다섯째, (충격에 강한 내구성) 대내외 충격에도 성장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원이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를 바탕으로 다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이후에는 3.5%로 하락하였다. 향후에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5만 달러를 달성하는 과정중 많은 충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내수 건전성은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부채 디레버리징을 경험하였으나 한국은 조정이 되지 않았다. 2013년 한국 가계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은 160.7%로 OECD 평균 137.8%보다 높다. 이러한 부채수준은 단기적으로 내수회복을 제약할 것이다. 또한 멀리 보면 자체 버블이 붕괴되어 위기를 유발하거나, 글로벌 충격 발생 시 위기 증폭의 요인이 될 것이다.

여섯째, (방향성이 뚜렷한 경제 철학) 경제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경쟁원리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는 경제이어야 한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의 주체들이 인기영합적인 경제기조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현재 세대가 편하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시장경쟁원리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2014년 시장규제 부문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6.9점으로 세계 9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아가 공정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져야 한다는 확고한 시장 수급 시스템이 없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개수만 보면 2005~09년 43개에서 2006~10년 47개, 2007~11년 59개로 증가하고 있다.

일곱째, (선진국에 걸맞은 국가의 품격)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 내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5.07점으로 OECD 32개국 내 평균 점수 5.80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순위는 OECD 국가 중 29위에 불과하여 사회적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편,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국가적 청렴도를 보인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4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은 27위에 불과하다.

■ 시사점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효율성, 미래지향성, 실현가능성이 핵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 복원력과 내수 건전성 제고를 통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규제완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새로운 천정(穿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혁신적 제조업 생산 구조의 확산과 산업간 효율성 전파 통로를 넓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원리와 공정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지는 완전경쟁시장을 추구해야 한다. **여섯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한국의 R&D 패러독스(paradox)를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 주체간 신뢰 향상, 부정부패의 고리 차단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으로 경제 내 비효율성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1.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의미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의미

- (의미) 1인당 국민소득(GNI)은 한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됨¹⁾

- 선진국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OECD 34개국의 2013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 달러(40,403달러)이며, 동유럽 및 중남미 제외 25개국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만 달러(4,9357달러)임
-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선진국 그룹에서 평균 이상의 국민소득이며 “선진국중의 선진국”임을 의미함
- 한편, 산유국, 도시국가 등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산업구조적 다양성과 경제 활동 및 정책의 독립성 결여로 완전한 경제 주체라고 말 할 수 없기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됨

- (계산 방법)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연앙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됨

- 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은 우리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총소득을 의미함
- 명목 GNI = 명목 GDP(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²⁾
-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GNI를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함
- 또한 자국통화 기준의 1인당 GNI는 국제비교를 위해 대미 달러 연평균 환율로 표시하기도 함

1) 선진국에 대한 기준은 1인당 GNI와 같은 경제력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함. 즉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아도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기대수명, 문맹률, 교육, 생활수준, 소득 불평등도, 국민의 건강, 삶의 질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2) 국외순수취요소소득(國外純收取要素所得, 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 국내인의 對 해외 생산요소 제공 대가 - 외국인인 對 국내 생산요소 제공 대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명목 GDP와 명목 GNI의 차이가 됨.

○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 비교

- 2013년 현재 OECD 33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는 10개국에 불과
 - 가장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노르웨이(10만 2,538달러)이며 다음으로 스위스(8만 9,479달러), 룩셈부르크(7만 7,587달러)의 순서임
 - 이외 호주, 스웨덴, 덴마크,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국민 소득 5만 달러 이상을 기록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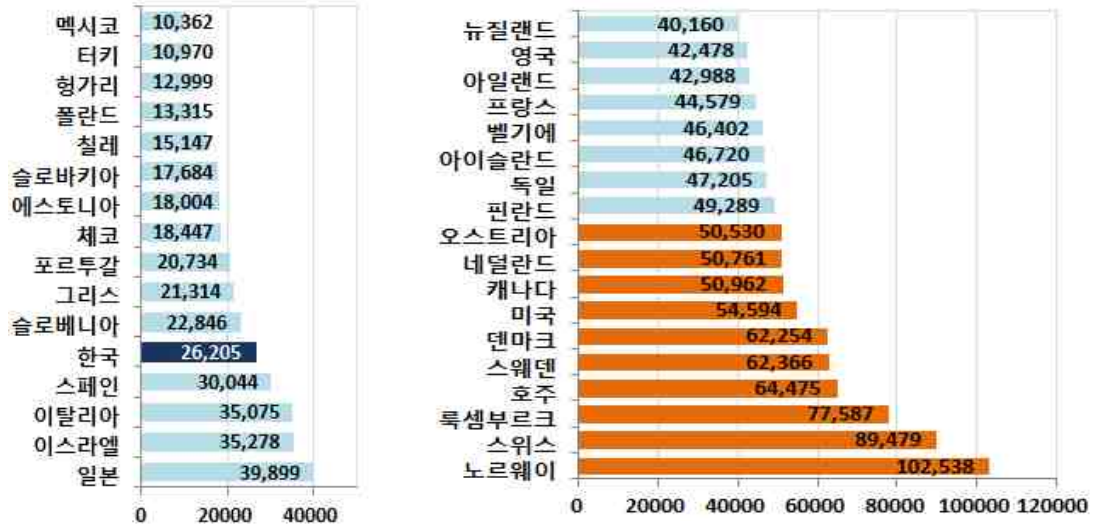
-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의 8개국임
 - 2013년 독일과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4만 7,205달러 및 4만 4,579달러임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스페인 등의 4개국임
 - 2013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9,899달러이며 스페인은 3만 44달러를 기록함
 - 한편,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에 4만 달러를 상회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12년 4만 8,044달러에서 2013년 3만 9,899달러 급락함
 - 이러한 변화의 가장 주된 요인은 엔/달러 환율이 2012년 연평균 79.8달러에서 2013년 97.6달러로 상승하면서 엔화 가치가 절하되었기 때문임

-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포르투갈 등 4개국임
 - 한국의 2013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2만 6,205달러로 2만 달러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체코, 멕시코 등의 동유럽 및 중남미 8개국임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2013년, 달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OECD의 GNI와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주 : 터키는 세계은행 통계 기준.

2. 한국의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시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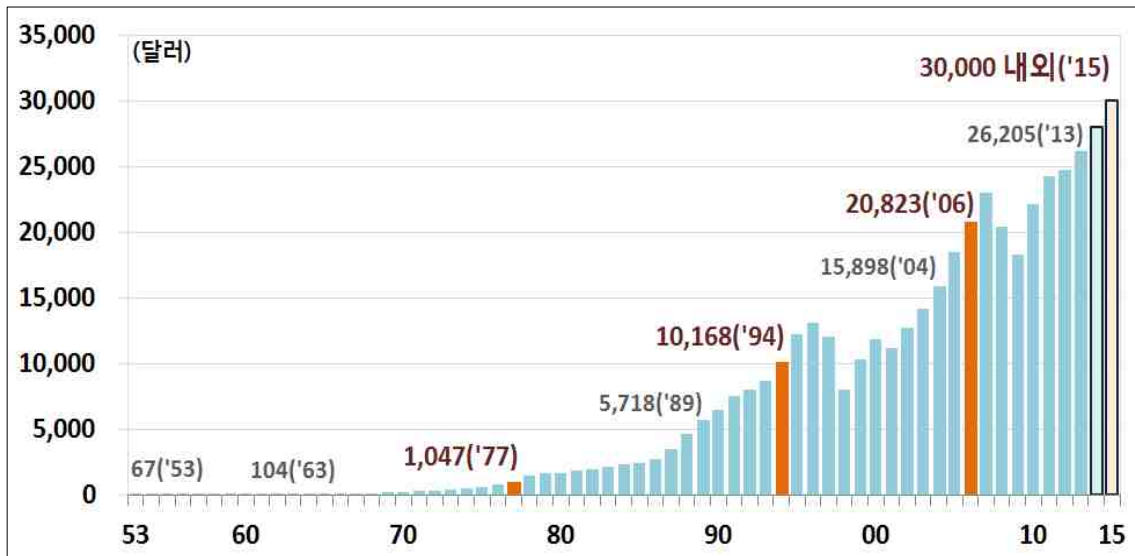
(1)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

- 한국의 공식적인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2013년 현재 2만 6,205달러이며 2015년에는 3만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현 1인당 국민소득 수준) 한국의 공식적인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새로운 국민계정 편제를 기준으로 2013년 현재 2만 6,205달러이며 2015년에는 3만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 2만 6,205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4년 2만 8,000달러 내외, 2015년에 3만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³⁾
- (1인당 국민 소득의 변화 추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까지는 빠른 속도로 달성하였으나, 이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3만 달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3)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2015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환율 전망치, 최근 3년간 GDP디플레이터 평균치,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기초로 산출.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1963년 104달러, 1977년 1,047 달러로 상승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1994년에는 1만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2년 만인 2006년에서야 2만 달러대에 진입함
-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 2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다시 2만 달러대로 진입하기 까지 4년이 더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2만 달러대로 진입 기간은 16년임
-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에는 3만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만 달러대에 최초 진입 이후 3만 달러 대를 기록하는 데에는 총 9년이 소요되는 것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추이〉



자료 : 한국은행(1953~2013년), 현대경제연구원(2014~2015년 추정).

(2) 향후 1인당 국민소득 전망

○ 전망의 전제조건

- 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이 높아질수록 GDP디플레이터증가율이 높아 지고 환율도 절상되어 1인당 GNI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
- 경제 주변 여건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충격과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
- 전체 인구수는 통계청의 중위 기준 인구성장 시나리오를 가정

○ 경제(잠재) 성장률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

- 2015년 이후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경제성장률별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함⁴⁾
- (기준 시나리오) 달성 기간 중 경제성장률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으로 가정하고 명목 GNI증가율은 4%대 중반, 원/달러 환율 절상률은 1%대 후반으로 가정함
- (비관적 시나리오)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가정하고, 명목 GNI증가율은 3% 내외, 원/달러 환율 절상률은 1% 미만으로 가정함
- (낙관적 시나리오) 경제성장률을 4% 중반으로 가정하고, 명목 GNI증가율은 5%대 중반, 원/달러 환율 절상률은 3% 내외로 가정함

○ 1인당 국민소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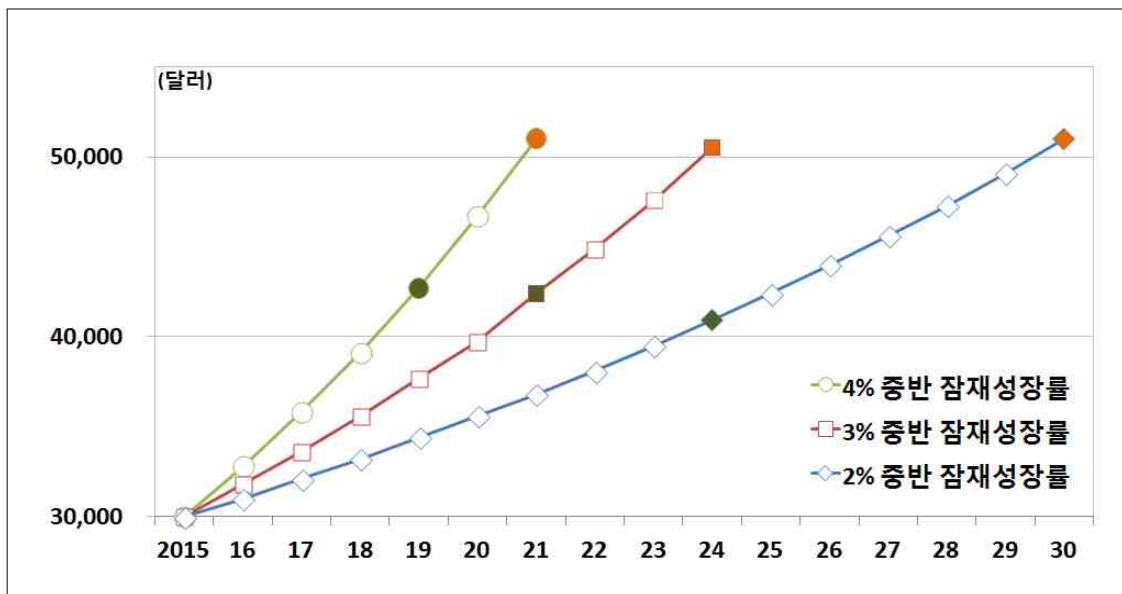
-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도달기간은 잠재성장률(경제성장률)이 2% 중반일 경우 15년, 3% 중반일 경우 9년, 4% 중반이면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기준 시나리오: 2021년 4만 달러 / 2024년 5만 달러)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이 유지될 경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총 9년이 예상
 -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 중반일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3만 달러에서 2021년에 4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6년 소요)
 - 이후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으로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9년임

4) 경제성장률에 따른 명목 GNI증가율과 환율 절상률은 글로벌 충격이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 흐름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2002~2007년, 2011~2013년의 두 기간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증가율,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환율 간의 탄력성을 감안하여 가정함.

- (비관적 시나리오: 2024년 4만 달러 / 2030년 5만 달러) 잠재성장률 2% 중반이 유지될 경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 중반일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3만 달러에서 2024년에서야 4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9년 소요)
 - 이후 5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은 2030년으로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걸리는 시간은 6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15년임

- (낙관적 시나리오: 2019년 4만 달러 / 2021년 5만 달러) 잠재성장률 4% 중반이 유지될 경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 중반일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3만 달러에서 2019년에 4만 달러에 도달하여 소요시간은 4년으로 전망
 - 이후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으로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6년임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별 1인당 국민소득(GNI)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참고 1> 1인당 GNI의 결정요인

- 1인당 GNI (달러화 표시) 는 직접적으로 명목GDP, 인구수,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환율에 의해 결정됨

· 1인당 GNI는 직접적으로 명목GNI, 인구수, 환율에 의해 계산

$$1인당GNI_t \text{ (달러화 표시)} = \frac{\text{명목GNI}_t}{\text{인구수}_t} \times \frac{1}{\text{원/달러환율}_t}$$

· 명목GNI는 명목GDP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 계산됨

1인당GNI_t (달러화 표시)

$$= \frac{\text{명목GDP}_t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_t}{\text{인구수}_t} \times \frac{1}{\text{원/달러환율}_t}$$

· 또한 명목GDP는 실질GDP증가율(경제성장률)과 디플레이터증가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1인당 GNI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1인당GNI_t (달러화 표시)

$$= \frac{\text{명목GDP}_{t-1} \times (1 + \text{경제성장률}_t + \text{디플레이터증가율}_t)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_t}{\text{인구수}_t}$$

$$\times \frac{1}{\text{원/달러환율}_t}$$

· 한편, 실질GDP증가율(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디플레이터증가율도 높아지고 환율도 절상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1인당 GNI는 결국 경제성장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참고 2> OECD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의 달성기간

- OECD 10개국 평균으로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년임
 -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도달하는 기간이 5.4년이며,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이르는 데에는 4.6년이 소요됨
 - ※ 단, 4만 달러 및 5만 달러 도달시점은 최초 도달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됨

- 가장 빠른 속도로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진입한 국가는 네덜란드이며, 가장 소요되는 기간이 길었던 국가는 스위스임
 - 네덜란드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1년,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3년이 걸려 총 4년이 소요됨
 - 반면 스위스는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5년,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11년이 걸려 총 16년이 소요됨

<OECD 선진국의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달성기간>

	진입연도			달성기간(년)		
	3만달러	4만달러	5만달러	3만→4만	4만→5만	3만→5만
네덜란드	2003	2004	2007	1	3	4
호주	2004	2007	2010	3	3	6
캐나다	2004	2007	2011	3	4	7
스웨덴	1999	2004	2007	5	3	8
노르웨이	1995	2002	2004	7	2	9
덴마크	1995	2003	2006	8	3	11
룩셈부르크	1991	1995	2003	4	8	12
오스트리아	1995	2006	2008	11	2	13
미국	1997	2004	2011	7	7	14
스위스	1987	1992	2003	5	11	16
10개국 평균	—	—	—	5.4	4.6	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 4만 달러 및 5만 달러 도달시점은 최초 도달 연도 기준.

3.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 (개요)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다음과 같은 「7대 필요조건」이 필요함
 - (새로운 경제 모델)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경제의 방향성을 정립해줄 ① 경제성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 (풍부한 성장잠재력) 최근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요소투입의 절대적 양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②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충분한 생산요소
 - (효율적 시스템) 나아가 선진국과 중진국의 구분 기준이 되는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③ 경제의 새로운 추동력을 담보하는 생산성 변혁
 - (경쟁력을 담보하는 혁신성) 세계 산업 지형의 급변 속에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④ 생산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 올 수 있는 기술 혁신
 - (충격에 강한 내구성) 또한 경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⑤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튼튼한 기초 체력
 - (방향성이 뚜렷한 경제 철학) 무엇보다도 경제철학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가계의 효용 극대화를 통해 최대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⑥ ‘게임의 규칙’이 확고한 시장경쟁원리
 - (선진국에 걸맞은 국가의 품격)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⑦ 경제 외적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① 새로운 경제 모델

○ 중장기적 방향성을 정립해주고 성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발전 모델이 확고하게 구축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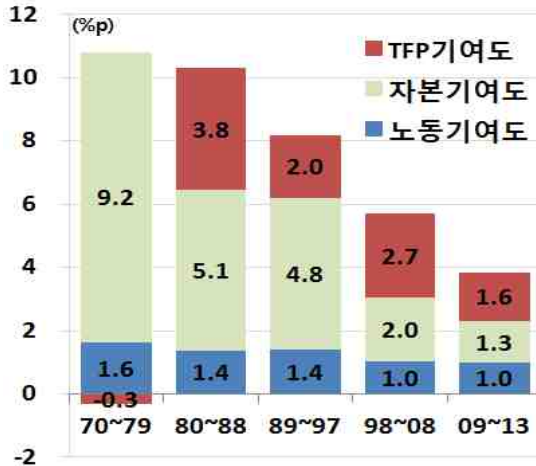
- 양적 투입이 아닌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제 모델이 필요함

- 금융위기 이전(1998~2008년)의 기간과 금융위기 이후(2009~2013년)의 생산 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2.0%p에서 1.3%p로 하락)하고 TFP의 기여도가 급락(2.7%p에서 1.6%p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이러한 효율성 하락(TFP 기여도의 하락)은 대외적인 여건 변화의 영향도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의 대내외 시장 구조에 맞추어져 있던 경제 성장 모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경제 내 낭비적 요소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 외형이 아닌 내실이 중심이 되는 경제 모델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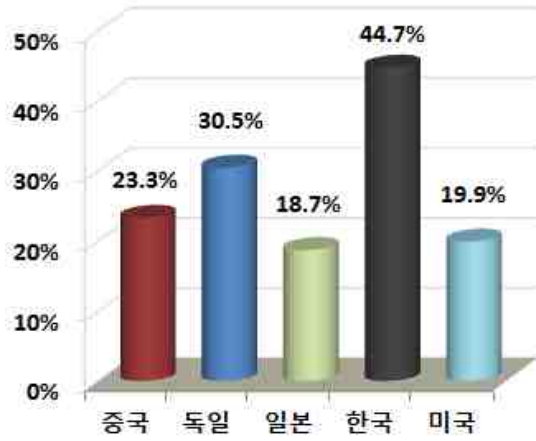
-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 발전 모델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임
-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수출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이 과도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1,000달러의 수출을 할 경우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제조업 강국인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4개국은 평균 231달러 유출에 불과
- 2011년 기준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4개국 평균 23.1%보다 21.6%p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해 국내 고용, 연관부문의 영업잉여, 조세 등의 부가가치에 대한 파급 경로가 차단되어 경제 성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경제 총량보다는 경제 활동이 가져다주는 유무형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이 필요함

<경제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2011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② 풍부한 성장잠재력

○ 자본과 노동의 절대 투입량이 보장되는 생산요소 수급 시스템을 갖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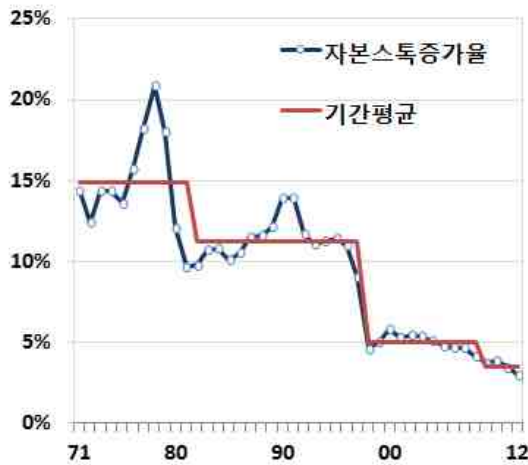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은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스톡 축적 중단 현상임

- 국내 고정자산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11.3%에서 위기 이후 5% 수준으로 크게 하락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3.5%로 다시 하락하면서 자본스톡 축적이 거의 정체되는 국면이 진행 중임

- 특히,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력의 절대 부족(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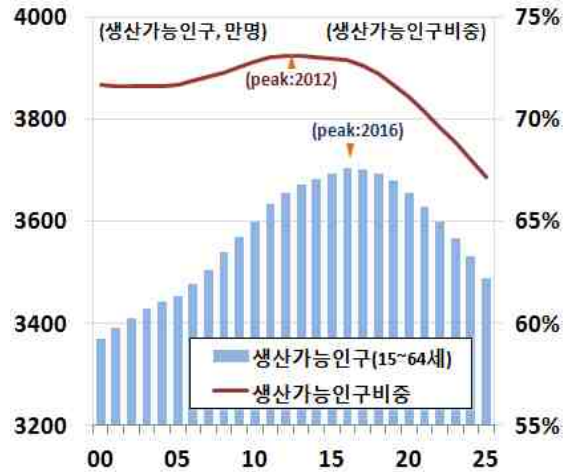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에는 67.2%까지 급락할 전망이다
-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6년에는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5년에는 3,490만 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고정자산 순자본 스톡증가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생산가능인구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③ 효율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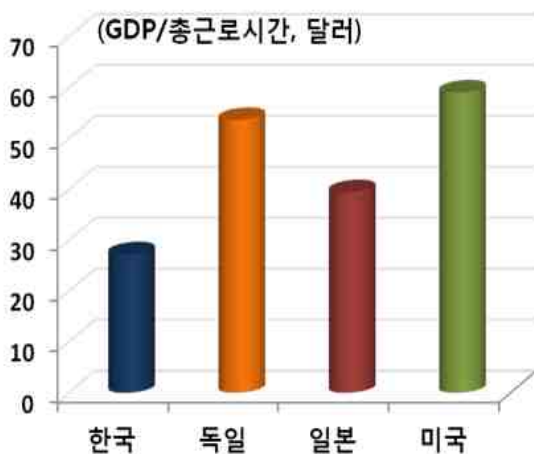
○ 새로운 추동력을 담보하는 생산성 변혁이 지속되는 경제

- 중국 등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사이에 위치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UNIDO의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은 2005년 이후 순위가 불변인 가운데, 중국은 2005년 세계 18위에서 2010년 7위로 급상승함
 -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순위는 2005년 14위 격차에서 2010년 3위 격차로 축소됨

-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은 높은 생산요소 비용과 이에 따르는 저(低) 생산성 문제임
 - 2010년 기준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GDP/근로시간)은 한국이 25달러 수준으로 독일과 미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함
 - 이는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으나 기업들이 주력생산제품의 고부가화 및 생산성 개선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에도 원인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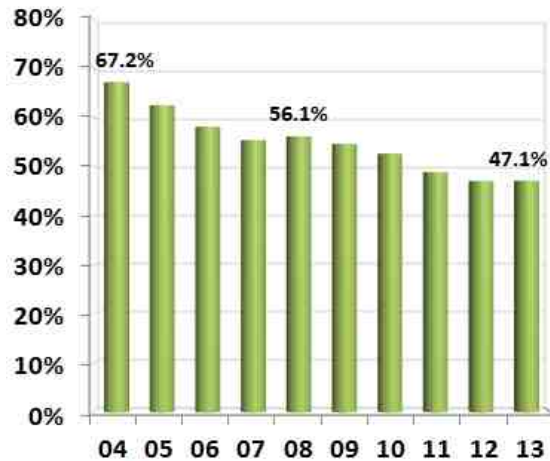
- 특히, 경제 내 서비스업 부문에도 제조업의 생산성이 파급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은 산업 구조가 절실한 상황임
 - 2013년 기준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은 제조업의 47.1%에 불과함
 - 특히, 이는 10년 전인 2004년 67.2%에서 그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근로시간 노동생산성(201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서비스업/제조업 노동 생산성 비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④ 경쟁력을 담보하는 혁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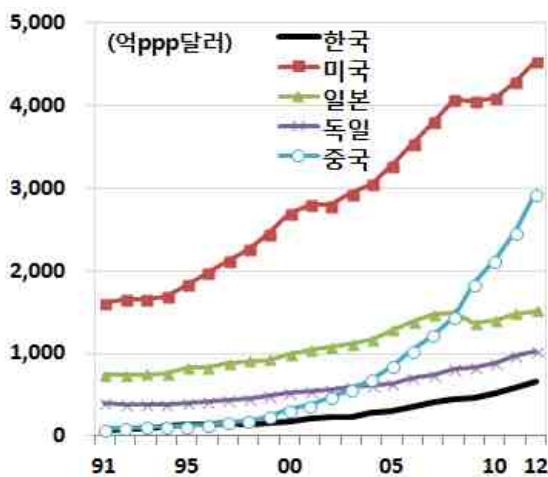
- 세계 산업 지형의 급변 속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보편화된 경제

- 기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에 있으나, 한국은 R&D 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부족하고 운용의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12년 기준 한국의 총연구개발비/GDP 비율은 4.36%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주요국의 총연구개발비/GDP 비율을 보면 미국 2.79%, 일본 3.35%, 독일 2.98%, 중국 1.98% 등임
- 그러나 R&D 투자의 절대적 규모가 여전히 낮고 투자의 시차효과, 투자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R&D 성과 지표로 볼 수 있는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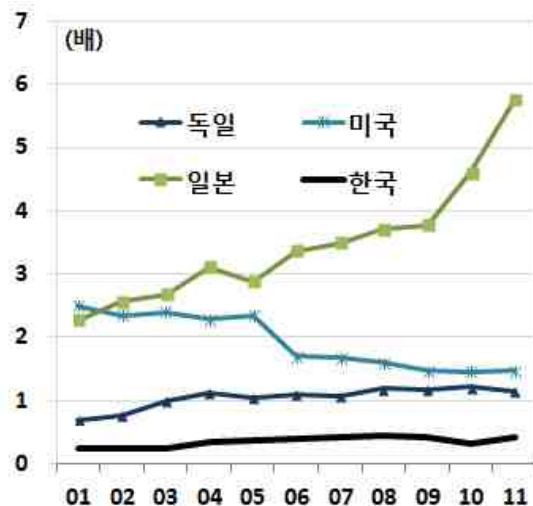
- 국가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를 보면 2011년 현재 한국은 0.41배로 여전히 적자 상태임
 - 반면 독일(1.15배), 미국(1.46배), 일본(5.75배)은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가 무역흑자를 의미하는 1 이상의 값을 기록함
- 특히, 여전히 연구개발투자는 제조업, IT 분야에 집중되는 측면이 높아 기술 혁신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1983년 이후 제조업 연구개발투자 / 총연구개발투자 비중은 항상 80% 이상을 상회
 - 2011년의 경우 제조업의 R&D투자액은 33.4조 원으로 전체 R&D투자액 38.2조 원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R&D투자액은 3.4조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에 불과함
 - 특히, 성과 측면에서 2008~12년 산업별 국내특허등록 건수를 보면 제조업이 약 32만 건으로 전체 약 41만 6,000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나,
 - 서비스업의 특허등록건수는 6만 7,000건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총연구개발비 규모>



자료 : NTIS, OECD

<주요국 기술무역수지비>



자료 : OECD, MSTI.

주 : 기술수출액 / 기술수입액.

⑤ 충격에 강한 내구성

○ 대내외 충격에도 성장 기초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수의 기초 체력과 건전성이 높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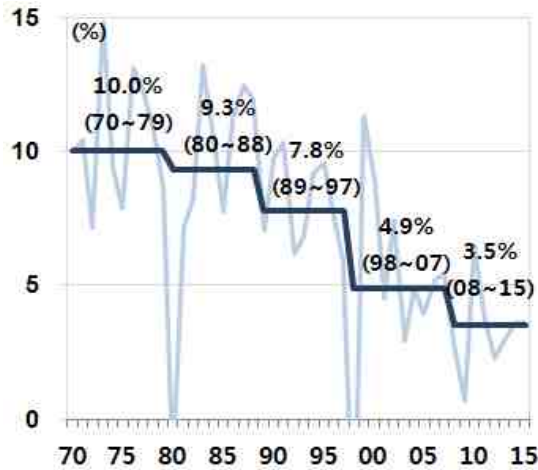
-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충격 직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역사적 경험이 반복되고 있음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89~1997년) 7.8%에서 외환위기 이후 (1998~2007년) 4.9%로 레벨 다운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5%로 다시 추가적인 하락세를 경험함
-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한국 경제 고유의 특성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해외 요인에 의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한편, 5만 달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외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수의 건전성이 취약할 경우 경제 발전이 후퇴(국민소득의 감소)되어 달성 기간이 장기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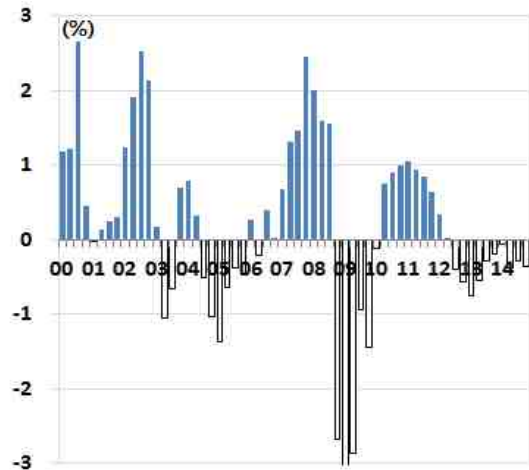
- 5만 달러 달성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국내 요인은 가계 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인한 장기 내수 디플레이션임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졌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13년 한국 가계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은 160.7%로 OECD 27개국 평균 137.8%보다 높은 수준임
- 특히, 최근 GDP갭률이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가계 부채 수준으로 위축된 소비 구매력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 내수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민소득의 후퇴를 가져옴
- 실제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국민소득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 7년이 소요되었으며,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4년이 소요됨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5)

<GDP갭률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⑥ 방향성이 뚜렷한 경제 철학

- 경제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경쟁원리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는 경제
 - 규제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시장경쟁원리가 보편화되어야 하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됨
 - 자유경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시장규제 부문의 경제자유지수는 한국이 10점 만점에 6.9점으로 세계 90위를 기록함
 - 그러나 미국은 이 부문에서 세계 21위, 일본 47위, 독일 76위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순위가 한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져 전체 후생이 극대화되는 시장수급 시스템이 필요하나 독과점 구조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산업을 보면 2005~2009년 43개에서 2006~2010년 47개, 2007~2011년 59개로 증가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되어 수익률은 높은 반면, 연구개발투자비율(자체사용연구개발비/매출액)은 낮고 내수시장집중도(내수출하액/내수시장규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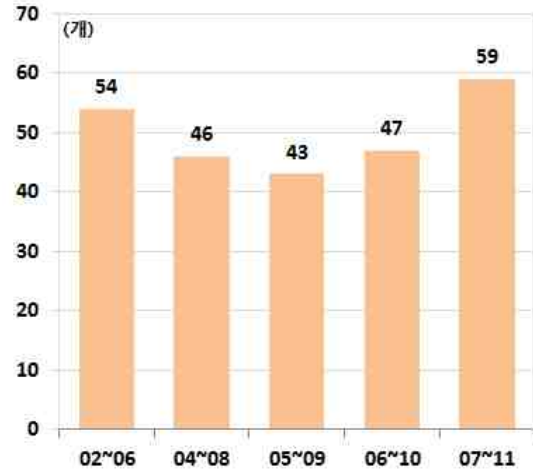
5) 현대경제연구원이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 수치임. 새로운 추정치는 기존 추정치에 비해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성장률은 소폭 상향조정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3.5%임.

<경제자유지수중 시장규제 점수(2014)>



자료 : 자유경제원. 주 : () 안은 순위.

<독과점구조가 유지되는 산업7) 수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⑦ 선진국에 걸맞은 국가의 품격

○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경제

- 사회적 자본은 경제 내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⁸⁾

- 그러나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⁹⁾ 중 29위에 불과하여 사회적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32개국 내 평균 점수 5.80점보다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5.07점으로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6)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8%보다 낮음. 또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는 77.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7.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5년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8) Knack and Keefer(1997)의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가 10% 하락 시 경제 성장률은 약 0.8%p 하락하고 Whiteley(2002)는 1970~92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뢰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실질 GDP가 약 0.6% 상승한다고 주장(현대경제연구원,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2014).

9)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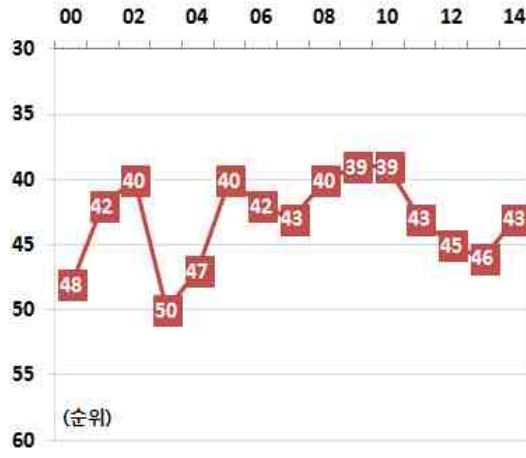
-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로는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6.66점으로 분석 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뉴질랜드(2위, 6.54점), 호주(5위, 6.46점), 미국(17위, 5.94점), 일본(23위, 5.40점) 등의 순서임
- 한편,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국가적 청렴도를 보임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43위를 기록함
 -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한국은 27위로 경제 발전 규모에 걸맞지 않은 청렴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

<OECD 주요국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201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순위, 10점 만점, 32개국 대상.

<한국 부패인식지수(CPI) 세계순위>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
 주 : 총국가수는 2014년 기준 175개국.

4. 시사점

첫째, 효율성, 미래지향성, 실현가능성이 핵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 (효율성) 기존 성장 방식에서의 양적 투입 위주가 아니라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제 모델이 필요함
 - 경제 발전 단계로나 시대적인 흐름에서나 한국 경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한 상황임
 - 이는 양적 투입에 의한 외형적 성장보다 질적 투입에 의한 실속 있는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임
 - 새로운 경제 모델의 기본 원칙은 모든 민간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효율성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

- (미래지향성)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virtuous circle)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급감으로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세수가 급감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한정된 정부 재원이 성장 부문에서 분배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경제 성장력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특히 향후에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지속되고 국가부채가 누적될 것으로 보임
 - 성장을 위한 정책적 비중을 높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확장하여 분배 수요를 충족하는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며, 언제나 복지 정책은 현 경제 상황에 부합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임

- (실현가능성) 이상에 바탕을 둔 선도형 경제 발전 모델보다는 현실적인 추격형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됨
 - 최근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축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경제의 특성인 소규모 개방경제는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여 현재의 경제력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의 선도자 보다는 선도자에 근접하여 추격하는 구조임

- 세계 경제 발전의 경험상 선도자는 많은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대부분은 차순위 후발 주자에게 그 지위를 내어 주는 경우가 빈번함
- 시장별로 기술이나 표준의 측면에서 선도를 하는 산업 모델이 가능하다면 미시적인 일부 섹터에서의 도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 또는 발전 모델에 대한 선도형과 추격형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됨

둘째, 경기 복원력과 내수 건전성 제고를 통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외충격 파급경로의 관리가 필요함
 -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교역 경로를 통한 특정 지역의 위기 전염 영향을 낮추어야 할 것임
 - 통상 대외 충격의 주된 파급경로인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성을 제고시켜 해외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함
- 민간 주체들의 소비 여력 확충과 가계 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통해 내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 소득 계층의 구매력을 확대시킬 여지가 없는 지를 소비세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가계 실물자산의 유동화, 가계 부채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소비 심리와 구매력을 억누르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의 시급한 연착륙이 요구됨
- 경제적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M&A 활성화를 통한 영세성 극복, R&D 자본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우선은 시급한 경기 안전 섹터의 창출을 위해 현재 경쟁력을 가지는 관광서비스, 문화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특히, 관광서비스업은 향후 중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¹⁰⁾에 대응하여 저가 관광 구조의 개편, 숙박 시설의 확충, 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임

셋째, 고갈되어 가는 생산요소의 새로운 천정(穿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성장 부문의 조기 산업화, 신수요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R&D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등을 통한 조기 산업화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과 더불어 고부가·고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인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함**
 -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산 등의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요구됨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보육 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미국과 독일¹¹⁾의 경우와 같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

10)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방한 요우커 1,000만 시대가 열릴 전망.

11) 독일의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은 2010년 13.1%로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비해 높고, 최근에는 '전문가

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외국인 우수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체류 만족도 제고 및 체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체류 지원 강화, 근로 환경 제고,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함

넷째, 혁신적 제조업 생산 구조의 확산과 산업간 효율성 전파 통로를 넓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도모해야 한다.

-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4T(Tax, Trade, Technology, Talent)¹²⁾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됨¹³⁾
 - (Tax) 세제면에서 제조업 혁신 목적의 연구개발, 인력육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임. 또한 법인세수 비중과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향에 대응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 운영이 요청됨
 - (Trade) 교역면에서는 시장 진입과 무역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함
 - (Technology) 기술면에서는 차세대 ‘한국형 제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과제를 개발하고, 기술 수요 해소와 기술 이전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협력 방안이 요구됨
 - (Talent) 인력면에서는 차세대 제조업 모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의 개발·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특히, 경제 내 서비스업 부문에도 제조업 생산성이 파급되는 경로를 다양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산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결합 및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이 서비스업에 파급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장비율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외전문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임.

12) 로버트 앳킨슨 등은 제조업 혁신을 유인할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세제(Tax), 교역(Trade), 기술(Technology), 인력(Talent)” 등 네 영역을 제시함.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2014),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VIP REPORT, 14-25 (통권 576호), 2014.07.16을 참조.

- 이를 위해서는 시장 개방도를 확대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시장원리와 공정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지는 완전경쟁시장을 추구해야 한다.

- 우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쟁원리의 확산이 필요함

-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목표 변수를 「규제 개수」에서 기업투자, 소비자효용, 시장공급자수 등의 「규제 개혁으로 발생하는 성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특히, 수개의 정부 부처에 얽혀 있는 규제는 상대적으로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덩어리 규제」에 대한 우선적 철폐 노력이 시급함
- 나아가 신설되는 규제는 예외 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멸되는 「규제 일몰제」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 또한 공정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져 경제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 수급 시스템이 요구됨

- 공정거래의 기본 원칙은 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방, 안전, 보건 등에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장 진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통신업 등과 같이 소비자 후생이 취약한 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 진입 확대와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매, 유통, 외식 등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 진입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여섯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한국의 R&D 패러독스를 해결해야 한다.

- 한국의 R&D 패러독스(paradox)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의 사업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연구인력 활용, 공공 R&D투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 높은 R&D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약한 ‘스웨덴 패러독스(Swedish Paradox)’와 유사한 ‘코리안 패러독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¹⁴⁾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선별하고 상품화·지식재산권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기술경쟁력의 뿌리가 되는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의 공동 연구 시스템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술 경쟁력은 곧 연구 인력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R&D 패러독스 문제가 공공 부문의 R&D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시스템의 체계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나아가 경제적 비중은 높으나 제조업에 비해 크게 취약한 서비스업의 R&D 투자 불균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경제 혁신 기반 구축 추세에서 서비스업이 소외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서비스업 중 통신, 문화, 금융, 물류 등 교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서, Fraunhofer(프라운호퍼), Leibniz(라이브니쯔) 등과 같은 독일식의 비대학·준공공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 확보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14) ‘스웨덴 패러독스(Swedish Paradox)’란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비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낮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의미함.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의 효율성과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 수요에 대해 산학연이 연계된 프로젝트 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⁵⁾

일곱째, 경제 주체간 신뢰 향상, 부정부패의 고리 차단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으로 경제 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 국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민간 주체간 사적 신뢰의 확산, 민간의 정부에 대한 공적인 신뢰의 향상이 필요함
 -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시스템 전반적 개혁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통합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진 정책 수행이 가능한 정부 추진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입법시스템 등 국민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요구됨
-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차단과 국민 의식 수준의 함양으로 국격에 걸 맞는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부패의 근절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친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의 정립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출발함
 - 사법당국의 경우에도 엄정한 법집행과 단호한 처벌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임
 - 나아가 부패가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강화와 홍보 노력 확대 등으로 선진국에 걸 맞는 의식 수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15) 독일식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이 대표적인 예임. 독일의 R&D 자금은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투트랙(two track)에서 지원되는데 연방정부는 주로 기초연구, 적용기술 분야 및 민간 기업의 R&D에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주로 지원함. 특히, 독일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있어 각 지역의 클러스터 내에 설립된 대표적인 비대학 공공연구기관인 「Fraunhofer(프라운호퍼)」, 「Leibniz(라이브니츠)」 등과 같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R&D 기술 사업화 등 효율성이 매우 높음.

< 參考 文獻 >

-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보도자료).
- 자유경제원(2014), 경제적 자유, 더 이상 옥죄지 말라 - 2014년 경제자유지수 발표 및 토론회 자료.
- 한국은행(2014), 「금융안정보고서」, 2014-10.
- 한국투명성기구(2014),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보도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9), “R&D 투자 활성화 방안, VIP REPORT, 09-29(통권 411호).
- _____ (2011), “과학기술강국 발목 잡는 코리안 패러독스”, VIP REPORT, 11-23(통권 제 493호).
- _____ (2012), “부패와 경제성장”, 경제주평, 12-18(통권 489호).
- _____ (2014), “201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경제주평, 14-02(통권 573호).
- _____ (2014), “중국인 관광객 사백만에서 일천만 시대로”, VIP REPORT, 14-04(통권 555호).
- _____ (2014),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현안과 과제, 14-07호.
- _____ (2014), “국내 MICE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14-10 (통권 561호).
- _____ (2014),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14-15(통권 566호).
- _____ (2014),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경제주평, 14-20(통권 591호).
- _____ (2014),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경제주평, 14-21(통권 592호).
- _____ (2014),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VIP REPORT, 14-25 (통권 576호).
- _____ (2014),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자본”, VIP REPORT, 14-30(통권 581호).
- _____ (2014),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VIP REPORT,

14-38(통권 589호).

_____ (2014),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현안과 과제, 14-42호.

_____ (2014),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경제주평, 14-45(통권 616호).

_____ (2014),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 현황 조사 및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45호.

_____ (2014),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과 시사점”, VIP REPORT, 14-43호(통권 594호). **HRI**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ks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2월 26일	12월 3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26	2.20	-0.06%p
	엔/달러	85.86	98.51	105.04	120.16	120.40	0.24¥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213	1.2134	-0.0079\$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8,030	18,038	8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7,819	17,451	-36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16	2.10	-0.06%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98.7	1,099.3	0.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48.2	1915.6	-32.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2월26일	12월 3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55.23	53.22	-2.01\$
	Dubai	107.99	100.38	107.88	56.32	53.60	-2.72\$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34.65	229.96	-4.6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